우암학원 창학 7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고품격 명품아파트의 기준! 승원팰리체
FELICE
www.승원건설그룹.com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340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8월 22일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 응급환자 태우고 119 뺑뺑이 언제까지…

## 의정갈등 장기화에 광주·전남 구급대원들 한계상황 봉착
## "119에 강제력 가진 병원 선정 권한 다시 부여하라" 호소

"숨이 넘어가는 환자를 두고 언제까지 전화를 돌려야 합니까." 〈관련기사 6면〉

의정갈등 장기화로 광주·전남지역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 구조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며 절규하고 있다.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수소문하느라 진을 빼고 발을 동동구르는 환자 가족의 원성까지 모두 구급대원들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시 북구 임동119센터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광주소방지부 이름으로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안전본부 차원에서 게재한 것이다. 광주·전남 일선 소방서에도 일제히 '환자 수용능력 확인 조항을 삭제하라', '119 구급대 및 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 '119 구급대 이송환자 수용률을 병원 평가지표에 반영하라'의 현수막이 걸렸다. 환자 목숨을 살리기 위한 구급대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호소다.

현수막에는 '응급실 뺑뺑이 대책마련 촉구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QR코드도 인쇄돼 있다. 서명운동은 지난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날까지 광주·전남 소방대원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만 322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A구급대원은 "의료대란 이후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환자이송이 시급한데도 전화 돌리기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며 환자를 받아주지 않고 광주·전남 대부분의 병원도 이송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A대원은 "교통사고 등 환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3차병원을 시작으로 2차, 1차 병원까지 차례로 전화를 돌려 이송 가능 여부를 물어야 한다"며 "예전이라면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이 가능했던 환자들이 제 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송지체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들의 폭언도 구급대원들이 감내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다급한 환자들의 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의정갈등이 초래한 사태에 환자와 가족들의 거친 항의와 욕설을 오롯이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응급실 이송이 지체되면서 응급 구조에 차질이 빚어지는 악순환도 되풀이되고 있다.

센터별로 배치돼 있는 구급차가 현장에 나가 이송을 하고 복귀해 다음 출동을 대비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전화기를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관할 지역 센터가 '공백'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센터 공백으로 구급차가 없어 다른 센터에서 출동하다보면 구조가 지연되고 대체 출동한 관할 센터에는 대기 차량이 없는 악순환도 되풀이 되고 있다.

전남지역 응급환자 이송도 마찬가지다. B 구급대원은 지난달 9일 추락 사고를 당한 환자가 발생했지만 병원들이 이송을 거부해 뒤늦게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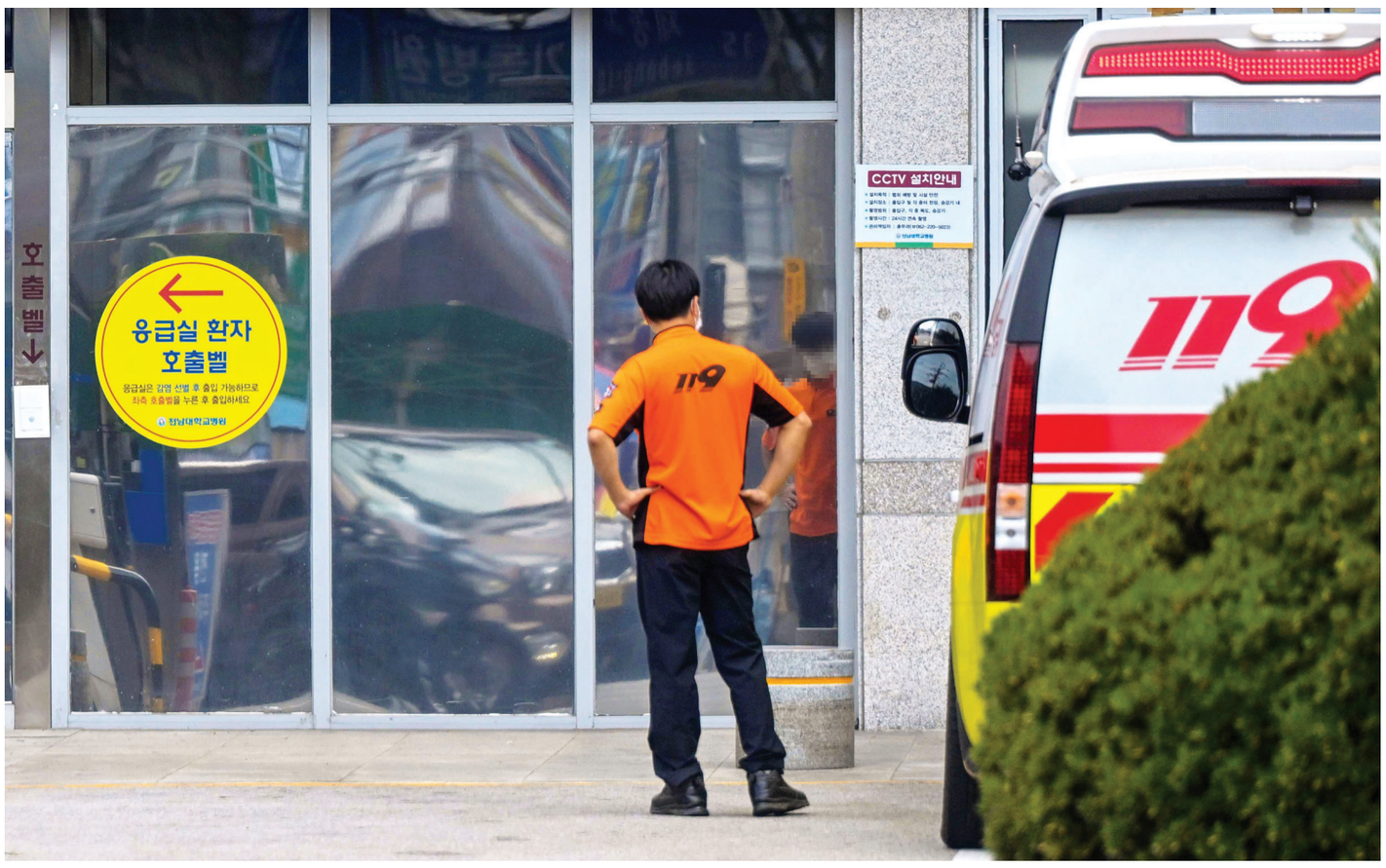
해당 환자가 뇌출혈 가능성이 커 중증외상센터로 이송하려 했지만 광주 권역센터, 전남 1·2차 병원 등 6곳 병원에서 모두 진료를 거부했다.

B 구급대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남 소방 본부 상황실까지 전화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본부도 병원 선정 권한이 없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결국 전남 권역센터 앞에서 1시간 30분 넘게 전화를 돌리며 대기하다 직접 병원으로 들어가 의료진에게 치료를 요청해 겨우 환자를 맡겼다"고 토로했다.

광주·전남 소방 구급대원들은 소방의 병원 선정 권한이 축소되면서 이런 문제가 고착화 됐다고 지적한다. 기존에는 구급대가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치료가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권한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병원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안전본부 광주·전남지부 노조 관계자들은 "평상시에도 충분히 환자 수용이 가능한데도 번거롭고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이 대부분"이라며 "병원의 환자 수용능력 확인 조항을 삭제해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판단해 이송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총 4296명의 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1376명이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 의료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 23일 광주시 동구의 한 상급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대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공원 앞 주차장 폐쇄 '포차거리' 양성화 ▶7면
굿모닝 예향 - 미술사학자 최열 ▶19면
KIA 믿을맨 전상현 "10승은 타자들 덕분" ▶22면

# 정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안해…농민 반발 클 듯

## 전남도 피해면적 1만 9603ha
## 인삼 잎줄기 마름 피해는 인정

정부가 지속적 폭염(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농민들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는 다른 시·도와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다만, 정부는 전남도에서 함께 건의했던 인삼 잎·줄기 마름(고사) 피해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장기간 지속된 폭염(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농작물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전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농림부는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지만 방제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농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전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그러나 평년 피해 면적(3876ha)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서 발생한데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폭염일수(23.1일)가 평년보다 16일이나 길고 평균기온(28.5도)도 평년보다 2.2도가 높은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서 비롯된 고온건조한 날씨가 벼멸구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이로인한 벼멸구 피해면적도 지난 22일 기준 1만 9603ha에 달한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정부가 농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시·군별로 고흥(2667ha)이 가장 많고 해남(2554ha), 보성(1988ha), 장흥(1776ha), 무안(1500ha) 등의 순으로 벼멸구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로서는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쌀값도 폭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17만 4904원(80kg)으로 지난달 5일 가격(17만 5368원)보다 464원(0.7%) 떨어진 상태로, 지난 2022년 9월 25일(15만 5016원)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인 평년가격(19만 1022원)과 비교하면 무려 8.4%(1만 6118원)나 떨어졌다. 20kg짜리로는 4만 3726원 수준이다.

전남도는 그러나 벼멸구 피해와 함께 건의했던 인삼 잎·줄기 마름 피해에 대해서는 농작물재해로 인정돼 오는 25일부터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영암(68ha), 해남(42ha), 나주(19ha), 영광(5.7ha) 등 135ha에서 폭염으로 인해 인삼 잎·줄기가 말라주는 피해가 속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지역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